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기간 : 2022.12.30(금) ~ 2023.01.05(목)

제공일시 2023 01 13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

문의 02 398 7675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기간 : 2022.12.30(금) ~ 2023.01.05(목)

제공일시 2023 01 1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##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

### 1. 韓 전기차 ‘리스·렌트용’은 美 보조금 받는다

-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에 따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산 전기차 리스나 렌터카 형태로 판매될 때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됨
- 미국 재무부는 29일(현지시간) 공개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세부지침에서 상업용 전기차를 ‘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납세자가 구매한 차량’이라고 정의했음
- 이는 딜러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아닌 법인·리스·렌터카 등을 상업용 전기차로 분류한 것임
- 다만, ‘3년 유예’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로 미국 측에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
- 현대자동차그룹은 최소한 상업용 전기차에서는 보조금 대상 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으며, 현대차그룹은 현재 5%가량인 리스 판매 비중을 30%로 대폭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힘

(한국경제, 2022.12.30) 박한신 기자

### 2. 상품별 ESG 정보 제공하는 디지털 여권

- EU는 2022년 3월 발표한 ‘새로운 에코 디자인 규정(ecodesign regulation)’ 초안에는 모든 물리적 제품에 ‘디지털 상품 여권(digital product passport)’ 제도가 포함됨
- EU는 제품의 내구성(durability), 재활용 가능성(reusability), 수리 가능성(reparability), 재활용 원재료 비율(recycled content), 환경 발자국(environmental footprint) 등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면서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포장·라벨·웹사이트 등에 표시하도록 했음
- 또다른 디지털 여권은 ‘배터리 여권(battery passport)’임 2020년 12월 ‘새로운 배터리 규정(battery regulation)’ 초안에서 ‘배터리 여권’ 개념이 등장했음
- 배터리 여권은 용량 2kWh 이상인 모든 산업용·자동차용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료 원산지, 탄소 발자국,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, 배터리 내구성, 용도 변경 및 재활용 이력 등을 상호 접근이 가능한 개방형 전자 시스템에 기록한 것으로, 2026년 1월 1일부터 EU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임

(매거진한경, 2022.12.31)  
김희영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

### 3. 세계 재보험사들, 전쟁·기후재해에 올해 보험료 최고 200% 인상

- 세계 재보험사들이 올해 보험료를 최고 200%까지 인상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음
- 재보험 중개업체 갤러거리에 따르면, 재보험사들은 허리케인 위험에 대한 노출도를 낮추기 위해 1월 1일부터 미국 재산보험 재보험료를 최고 150% 인상했음
-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스위스리는 지난해 자연재해로 전세계적으로 1150억달러(147조원)의 보험손실이 발생했다며, 10년간 평균손실인 810억달러(103조원)를 크게 웃돈다고 밝혔음
- 전쟁으로 러시아에 발이 묶인 수백 대의 항공기로 인해 올해 항공 재보험료 역시 최고 200% 올랐음

(연합뉴스, 2023.01.04) 김계환 기자

## 1. 2023년 주목해야 할 환경소송 사례

- 법무법인 톰슨 코번에 의하면, 2005년 이후 PFAS 수질오염으로 인한 소송은 2005년 이후 6400건 이상 증가했으며, 로이터는 2023년에 화제가 될 것 같은 기후 및 환경소송 4건을 설명했음
- 특히 몬태나주에서 젊은이들이 정부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헌법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6월에 재판이 예정되었음
- ‘호놀룰루 대 수노코 사건’의 경우, 메이저오일에 대한 기후소송이 주법원과 연방법원 어디에 속하는지를 두고 수년간 논쟁을 벌여왔는데, 정유사들은 주법원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연방법원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함
- 공공수도시스템의 PFAS 오염에 대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기반한 소송은 2023년 첫 재판이 예정되었는데, 3M 등 PFAS가 함유된 소방용 발포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

(Reuters, 2023.01.03) Clark Mindock 기자

## 2. 대만중앙은행, 인플레이와 경제성장모델에 기후변화 리스크 반영

- 대만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나 대만 중앙은행은, 인플레이와 경제 성장에 관한 모델이나 예측을 할 때, 기후변화 리스크를 포함시키기 시작해,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
- 대만은 작년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밝혔고, 이를 위해 2030년까지 9000억 대만 달러(290억 달러)를 쓰겠다고 약속했으며 지속가능한 금융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통화 정책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
- 대만중앙은행은 ‘그린스완’ 위험을 지적하며, 세계의 다른 중앙은행도 기후변화를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대만도 이를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음
- 이는 기상 요인을 예측 모델에 짜넣어, 물가나 GDP 성장률 등의 예측에의 영향을 분석한다는 것임

(Reuters, 2022.12.31) Ann Wang 기자

## 3. 싱가포르 첫 정부 지속가능성 최고 책임자 임명

- 싱가포르는 지속가능성 및 환경부(MSE)는 최초의 정부 지속가능성 최고책임자(GCSO)로 Lim Tuang Liang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
- 이는 유엔 2030 지속가능개발(SDGs) 어젠다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이행 전략인 ‘싱가포르 그린플랜 2030’ 수립에 따른 것으로, 2025년까지 태양 에너지 보급을 4배로 늘리고, 2030년까지 매립지의 폐기물을 30% 감축하며, 물 소비량을 줄이고, 건물을 녹화하며, 보다 깨끗한 에너지 자동차 등이 포함됨
- 싱가포르는 2030년경 배출 정점에 도달하기로 약속했으며, 최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
- 그린플랜은 2025년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약속을 포함, 정부 조달 및 입찰에도 지속가능성 관행을 도입할 예정임

(ESGToday, 2023.01.02) Mark Segal 기자

## 1. 미래 핵심 먹거리 보고...韓 기업엔 ‘기회의 땅’

- 코트라가 발표한 호주 산업과학자원부의 분기별 자원 및 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, 호주의 자원 및 에너지 수출 매출 규모는 2021~2022년 4050억 호주달러로 추산되며, 2022~2023년 4190억 호주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현재 호주가 보유한 핵심광물 지표를 살펴보면, 리튬은 2021년 기준 세계 1위 리튬 생산·수출국임 니켈은 매장량 2위 국가이며, 코발트 역시 보유국 중 2위임 현재 이들의 생산량이 각각 6%, 3% 정도에 그치고 있어, 생산량 증가에 따라 향후 주요 공급국으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
- 특히 호주는 각 주(州)별 지원도 활발하며 호주 정부는 핵심광물을 기반으로 ▲안정적이며 견고한 공급망 지원 ▲전문적 기량·기술·선진적 제조업 역량 강화 ▲지역 일자리 창출 및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임

(에너지경제, 2023.01.01) 김아름 기자

## 2. 전기차 보조금 개편된다...국산·수입 간 차이 벌어지나

- 환경부가 국내 사후서비스(AS) 인프라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을 추진하면서,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간 보조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
- 2일 업계에 따르면, 환경부는 올해 전기승용차 전체 국고보조금 상한선을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
- 환경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연비, 주행거리 등 전기차 성능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, 충전 기술을 포함한 제조사의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임
- 외국 제조사들은 국내에서 서비스센터 운용 수준 등이 저조하기 때문에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, 테슬라 등 수입 전기차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임

(뉴스토마토, 2023.01.02) 황준익 기자

## 3. ‘중국 견제’ 합심한 미국·일본...“인권 침해하면 공급망서 배제” 조직 신설

- 미국과 일본은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조직을 신설,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정부 차원에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중국을 국제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시도에, 일본이 적극 협조키로 했음
-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, 5일 미국을 방문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(USTR) 대표를 만나 조직 설립 각서에 서명함
- 태스크포스(TF) 형태의 조직으로, 일본에선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이, 미국에선 USTR와 국무부, 상무부, 노동부 등이 참여함
- 신설 조직은 강제 노동, 인종·종교로 인한 차별 등을 방지·조장하는 국가나 기업을 국제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,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행동을 하는 것을 지원함

(한국일보, 2023.01.05) 최진주 기자

(한겨레, 2023.01.05) 김소연 기자

## 1. SK어스온, 英 아줄리와 손잡고 미국·호주서 탄소포집저장(CCS) 사업 추진 / 포스코인터내셔널 통합법인 출범

- SK이노베이션의 석유개발 자회사인 SK어스온이 영국의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(CCS) 전문 기업 아줄리와 손잡고 CCS 사업 발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음
- 양사는 상업성 높은 프로젝트를 발굴해,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지하 지질 구조에 영구적으로 주입 및 격리할 수 있는 CCS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음
- 아줄리는 영국에 본사를 둔 CCS 전문기업으로 호주, 영국, 유럽, 미국 등에서 CCS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한편,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의 통합법인이 1일 공식 출범했음
- 포스코인터내셔널은 ▲사업구조 강건화를 통한 경영 안정성 증대 ▲글로벌 친환경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도약 ▲신성장 사업 추진 가속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(이투데이, 2023.01.02) 강문정 기자

(서울경제, 2023.01.02) 진동영 기자

(이투데이, 2023.01.02) 강문정 기자

## 2. 갈 길 먼 탄소중립...200대 기업 스코프3 공시율 35% 불과

- 올해 글로벌 ESG공시 최종 기준 완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, 국내 시총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스코프3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은 35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
- 스코프3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은 총 70개사로, ▲자동차부품 8개사 중 7개사(87.5%) ▲금융지주 9개사 중 7개사(77.77%) ▲비금융지주사 17개사 중 11개사(64.7%) ▲은행·증권·카드 8개사 중 5개사(62.5%) ▲건설·조선 12개사 중 6개사(50%) ▲보험 6개사 중 3개사(50%) 등이 50%를 넘겼음
- 한편,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ESG 점수도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음
- 한국ESG기준원(KCGS)이 국내 기업 772곳을 대상으로 글로벌 ESG 동향을 고려한 평가모형을 적용해 ESG 등급을 측정한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전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으며, 특히 '매우 취약'에 해당하는 D등급이 폭증했음

(한스경제, 2023.01.04) 김동용 기자

## 3. SK에코플랜트, 세계 1위 건설사와 그린수소 시장 선점한다

- SK에코플랜트가 세계 1위 건설사인 CSCEC(중국건축공정총공사)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,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공동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음
- CSCEC는 세계 1위 건설사로서, 전 세계 총 77개국에 진출해 있음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아프리카, 아시아 등 해외 및 중국 본토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공동개발에 적극 협력할 예정임
- SK에코플랜트는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기술력, 사업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역량을 제공하고, CSCEC는 전 세계 77개국에 이르는 강력한 해외 거점망을 제공할 계획임
- 양사의 1차 개발 대상 지역은 재생에너지 분야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이집트, 중국 등임

(가스신문, 2023.01.05) 한상원 기자

# 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기간 : 2022.12.30(금) ~ 2023.01.05(목)

제공일시 2023 01 1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## BP·다농, 그린워싱 비난, 환경 소송 받아

- 글로벌 석유가스기업 BP가 2023년 넷제로 계획을 발표한 후, 가디언지 등 주요 외신들은 “올해 청정 에너지를 향한 BP의 성과와 노력은 점점 감소하고 그린워싱이 더욱 증가할 것”이라고 비판함
- BP는 올해 초 연례 보고서를 통해 재생 에너지, 수소 및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2025년까지 전체의 40% 이상, 2030년까지 약 50%까지 높일 계획임을 밝힘. 연료 공급원, 전기차 충전 사업 등에도 20억 달러(약 2조원)-30억 달러(약 3조원)를 더 투자할 예정임
- 하지만 환경단체와 외신들은 BP의 넷제로 계획을 두고 '청정 에너지보다 화석 연료를 우선시 한다', '재생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느리다'는 비난을 쏟아냄
- 먼저 에너지 투자 규모에서 격차가 있었음. BP는 올해 재생 에너지 및 저탄소에 대한 예산을 30억 달러(약 3조원)-50억 달러(약 6조원)로 책정했지만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금액은 이보다 2배 이상인 75억 달러(약 9조원)인 것으로 나타남. 반면 저탄소 에너지 프로젝트에는 2050년까지 최대 60억 달러(약 7조원)를 투자하기로 함
- BP는 올해 초 영국의 소셜 미디어인 '인플루언스 애드(Influence ad)'에 녹색 에너지 투자에 대한 광고로 80만 파운드(약 12억원) 이상을 투자함. 영국 내 수천만 명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추정됨. 이전에도 석유와 가스 생산을 점차 줄이고 저탄소와 재생 에너지 자원에 더 많은 투자하겠다는 넷제로 전환 광고를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등 SNS에 약 70만 달러(약 8억원)를 지출함. 녹색 에너지 회사 인수를 기념하는 광고에도 약 100만 달러(약 12억원)를 지출함
- 이를 두고 외신들은 “BP는 화석연료 회사를 공격적인 이미지로 만들었다”며 “회사가 배출량을 줄이고, 재생 에너지를 확장하며, 저탄소 투자에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는 주장을 재포장(reimagine)하고 있다”고 말함
- 다농은 환경단체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음. 클라이언트어스(ClientEarth), 서프라이더 유럽재단(Surfrider Foundation Europe), 제로 웨이스트 프랑스(Zero Waste France)를 포함한 환경 및 법적 캠페인 단체 그룹은 9일(현지시각) 프랑스에 기반을 둔 글로벌 식음료 회사인 다농(Danone)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함. 파리 고등법원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최초 청문회를 개최할 시기를 결정할 것이며 소송을 개시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상반기에 날짜를 정할 예정임
- 브랜드 감사 조사에 따르면, 다농은 2021년 에비앙(Evian), 볼빅(Volvic), 액티바(Activia)를 포함한 브랜드의 포장에 75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세계 10대 플라스틱 오염 기업 중 하나임. 상위 10위 목록에 있는 다른 회사로는 코카콜라(The Coca-Cola Company), 펩시코(PepsiCo), 네슬레(Nestlé), 유니레버(Unilever), 몬델레즈(Mondelēz), 마르스(Mars), P&G(Procter & Gamble), 필립 모리스(Philip Morris International), 페레로 그룹(Ferrero Group)이 리스트에 올라있음
- 성명서에서 소를 제기한 그룹은 다농이 프랑스 '경계의 의무 법(Duty of Vigilance)'에 따라 플라스틱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. 프랑스에 본사를 둔 대기업은 매년 경계(Vigilance) 계획을 발표하여 공급업체 및 하청업체의 환경 및 사회적 위험과 영향을 명시해야 함.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들과 관련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판사 앞에서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음

(cleantechnica, 2022.1.10)  
(인팍트온, 2022.1.11) 홍명표 기자

- 그러나, 클라이언트어스는 주요 플라스틱 포장 생산자이자 유통업체인 다농이 이 법에 따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. 다농은 120개국 이상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브레이크프리플라스틱(Break Free From Plastic)에 따르면 세계 10대 플라스틱 포장 생산업체 중 하나임
- 다농, 프랑스 맥도날드, 까르푸(Carrefour)를 포함하여 프랑스에서 운영되는 여러 식품 회사에 대해 캠페인을 시작하여 이들 대기업의 계획을 프랑스 법에 맞추도록 경고함. 다농이 캠페인에 응했지만, 단체들은 “답변이 미흡하고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”고 말함
- 다농은 환경 투명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인정받았으며, CDP의 2022 환경 공개 평가에서 1만8000개 이상의 평가대상 기업 중에서 12위 안에 들어간 기업 중 하나임. 그러나, 회사의 기업 지속 가능성 목표에는 2025년까지 100% 재활용 가능, 재사용 가능, 퇴비화 가능한 포장에 도달하는 순환 경제 목표가 포함되어 있지만, 클라이언트어스는 “지금까지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9%만이 재활용되었기 때문에 재활용은 제한된 솔루션”이라고 주장함